



회원사 소식



▣ 포스코 ‘제2회 출자사 공정거래아카데미’ 개최

포스코(회장 정준양)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을 출자사로 확산시켜 나감에 따라, 체계적인 학습과 토론회를 통해 각 출자사 공정거래 담당자의 상담역량 제고와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를 선도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출자사 공정거래 아카데미를 개최해오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3월 26일 포스렉에서 ‘제1회 출자사 공정거래 아카데미(Fair Trade Academy)’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26일에 ‘제2회 출자사 공정거래아카데미’를 포스코센터 커뮤니티 훈에서 개최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된 ‘공정거래 아카데미’에서는 포스코 공정거래지원팀과 포스코 기업집단 소속 1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 업무 담당자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스코 법무실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례를 발표했으며, 계열사별 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법률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포스메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심결사례를 분석·정리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포스틸에서는 사내 CP 인식수준에 대한 조사 등을 토대로 CP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최근 하도급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더불어, 각 주제발표 사이에 참석자들 간의 격의 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계열사 간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포스코는 향후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들의 공정거래역량 향상을 위해 출자사 공정거래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 SK건설, 2009년도 상반기 CP 교육 및 자율준수협의체 모임 진행



2007년 6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결정하고 2008년 3월 CEO가 CP 도입을 내·외부에 천명한 이후부터 CP를 운영해오고 있는 SK건설(대표 윤석경)은, 2008년 11월의 CP 교육 실시에 이어 지난 6월 23일에도 공정거래 전문가를 초청해 2009년도 상반기 CP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CP 교육에서는 최근 하도급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선정해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에 대한 이해도 측정을 위한 간단한 테스트와 설문 결과, 교육 참석자들은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하반기에는 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에는 SK건설 자율준수 관리자인 양정일 법무실장을 비롯해 8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유관부서의 팀자율준수관리자 50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자율준수협의체 모임도 진행되었다. SK건설은 오는 10월에도 하반기 CP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LG텔레콤, 중소업체에 협력사 자격 오픈

4G 구축 위한 대규모 투자 앞두고 거래가 없었던 우수 기업들에게 납품 문호 개방

LG텔레콤(대표 정일재)은 6월 25일부터 신규업체 등록 및 제안 프로세스를 개편, 기존 공급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중소업체에 협력사 자격을 오픈했다.

이를 위해 중계기 업체 대상의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6월 24일 오후 공사자재 및 부대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단말·데이터장비 업체 대상의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LG텔레콤의 이런 활동들은 최근 통신 사업자들이 중소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각종 구매제도 개선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관심이 고조됐다.

6월 24일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기존 협력사 27개사보다 20개 많은 47개사가, 중계기 업체 설명회에는 기존 협력사 7개사보다 약 4배 많은 27개사가 참석하면서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LG텔레콤의 협력사 자격 오픈의 골자는 4세대(4G) 구축 등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그동안 거래가 없던 우수 기업들의 납품 문호 개방에 있다.

신규업체 등록을 위한 절차로는 먼저 벤처산업협회(KOVA), LG텔레콤 사내 추천, 사이트(<http://suppliers.lgtel.co.kr>) 공모 등을 거쳐 신규업체 사전등록이 성사되면 서류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웹사이트 공모는 365일 운용함으로써 관심 업체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기존 공급업체와 함께 평가 및 인증절차를 받아 신규 공급업체로 선정된다.

서류 제출 등의 과정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해 불필요한 접촉을 없앴다.

각종 절차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등록절차와 규정, 제품 규격 등을 명문화해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기준과 결과도 모든 공개한다.

특히, 업체들에 구매 규모 정보 등을 제공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개발 구매 심의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 관련 부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며 1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1년 단위의 단가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는 잦은 입찰로 인한 과당경쟁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제품별 공급업체 수를 관리해 협력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원사 소식



□ 하이닉스반도체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주제로 특강 실시

자율준수관리자에 최민구 전무 선임



하이닉스반도체(사장 김종갑)는 6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재경실, 구매실 및 제조본부 소속 하도급 업무 담당자 55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하이닉스반도체 법무팀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를 계기로, 하도급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하도급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시켜줄 필요성이 부각되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팀 소속 노형구 차장이 강의를 맡았던 이번 특강은 하도급업무 담당자들에게 하도급거래 해당요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및 대처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하이닉스반도체 공정거래 자율준수사무국 파트를 총괄하고 있는 노 차장은 다년간의 공정거래업무와 하도급업무에 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실제사례를 거론하며 실무적 관점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 참석한 직원들은 강의 중에도 하도급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그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하도급법 전반에 걸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하이닉스반도체 공정거래 자율준수사무국에서는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반기당 2시간 이상씩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이사회규정 제11조(부의사항)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에 의거해 5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율준수관리자를 최민구 전무(경영전략실장)로 변경·선임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2007년 6월 CP 도입을 선언한 이후 자율준수관리자 서신 발송, 상담 및 신고 처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실시, 웹사이트를 통한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실질적인 CP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 계룡건설, 200여개 협력사들과 상생협약 체결

지방건설사로는 첫 사례

계룡건설이 6월 25일 오전 대전 월평동 본사 사옥에서 200개 협력회사들과의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체결·선포식을 개최했다.

계룡건설의 이번 협약 체결은 지방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주)계룡건설산업은 1970년 설립 이후 39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고 발전을 거듭해 지난해 종합시공능력 평가순위 21위(시평액 1조 2,693억)를 기록한 중견 건설회사다.

계룡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용)을 근간으로, 금융기관 연계 추천협력사 대출지원 10억 원, 금융기관 연계 계약금액 담보대출 지원 15억 원,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협력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8억 원 지원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100% 유지,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을 44%에서 60%로 개선, 현금지급 대상을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대금지급조건도 개선하게 된다.

품질개선활동 지도, 품질개선 교육훈련 실시,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 공동 특허출원 및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품질·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게 된다.

계약이행보증 면제 범위를 2,000만 원 이하 건에서 3,000만 원 이하 건으로, 하자보증 면제도 건축 골조공사, 습식공사(조적, 미장, 타일, 기포 등)로 조정하고,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운영하는 등의 경영 및 기타 지원도 실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계룡건설에 대해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원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1~2년) 및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약이행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는 계룡건설이 협력사들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 문화가 지방에도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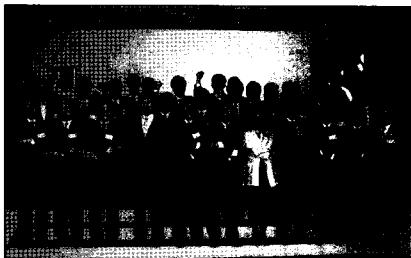


회원사 소식



□ 5개 대형마트와 1만여개 납품업자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100% 현금성 결제’ 등 자금, 인력, 교육 등 지원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쇼핑(롯데마트), (주)이랜드월드(2001아울렛) 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 등 5개 대형마트와 10,440개 납품업체가 유통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5개 대형마트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등 200여 명은 6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 서동원 공정거래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5개 대형마트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협약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한 법규를 개정·완비해 이날 대형마트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발표하고 공정한 거래와 협력회사와의 모범적인 거래문화 정착을 선포하게 된 것.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경상)를 비롯한 4개 대형마트 대표들은 선포식에서 수평·수직적 협약서에 서명하고 그 실현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은 배타적 거래 금지와 다른 경쟁업체의 경영 방해행위 금지 등 대형마트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수평적 협약과 대형마트와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공평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수직적 협약을 골자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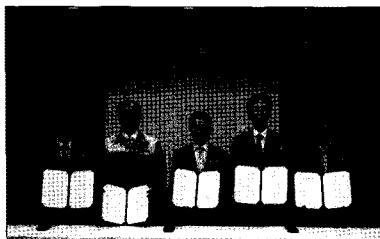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하고,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실천사항으로는 △ 공동판촉·할인행사, 종업원 파견요청, 반품에 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등 공정한 계약체결 및 서면화 의무 △ 매입가격(판매수수료, 판매 장려금, 납품가격) 등의 공정한 결정 절차 도입 △ 납품업자 입·퇴점 절차의 공정한 절차 도입 및 공표 △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 납품업체의 거래만족도 조사 공동 실시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적인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이다.

상생협력부문에서는 네트워크론 3,226억 원, 미래채권 담보대출 500억 원, 추천은행 저금리 지원 124억 원, 신선단지 상생선급금 지원 100억 원, 상품구매자금 선지원 585억 원 등 총 4,535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대금지급조건도 △ 현금성결제비율 100% 유지(5개 마트) △ 중소기업 및 PL협력회사 100% 현금지급(신세계) △ 홈에버 인수 협력업체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55% → 100%, 삼성테스코) △ 산지 농수축산물 공급업체 대금지급횟수 확대(월2회 → 월3회, 롯데쇼핑) △ 중소납품업체 결제기일 단축(45일 → 40일, 농협중앙회) 등의 조치로 개선하게 된다.

그리고 판매·서비스 교육 지원, 유통대학 참여 지원, 윤리경영, 경영컨설팅, 제품 컨설팅, 재고·상품정보 등 매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인력·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신제품·탄소인증제품 공동개발, 상생비지니스 모델 개발, 중소기업 상품전 개최, 특허보유업체 우대 등으로 기술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 현대·기아차그룹 '녹색설비 브릿지론' 업무협약 체결

기업은행과 함께 1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위한 '녹색설비 브릿지론' 개발



현대·기아차 그룹이 기업은행과 손잡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한다.

현대·기아차 그룹(회장 정몽구)은 6월 17일, 충남 현대제철 당진공장 홍보관에서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 김한수 현대차 통합구매사업부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기아차 녹색설비 브릿지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녹색설비 브릿지론은 현대·기아차 그룹이 기업은행과 함께 녹색성장산업 육성과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1차 협력사들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금융상품이다.

현대·기아차 녹색설비 브릿지론을 이용할 경우, 현대·기아차 및 현대제철의 1차 협력기업은 현대·기아차 와 현대제철과의 설비 계약을 근거로 기업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이상네트웍스(www.e-sang.net)'를 통해 2차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및 용역 등의 구매 자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 녹색설비 브릿지론을 통해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BB인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를 일반 신용대출 대비 최대 3.5%p 저렴하게 제공해 금융비용을 절감토록 했으며, 신용등급 BBB 이상 우수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대출한도에 최대 4억 원까지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한도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지원을 통해 최대 100억 원까지 특례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차 그룹은 1차 협력업체들과 2차 협력업체들이 구매주문을 체결하고, 주문 정보를 기업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http://bridge.vaatz.com>)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등 현대·기아차 녹색설비 브릿지론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질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녹색설비 브릿지론은 협력 업체들 간의 자금 유동성 확대를 통해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업체들까지 그 지원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기업은행은 1차적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대·기아차 녹색설비 브릿지론을 제공하며, 이를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위아 등 그룹 내 다른 기업들로 점차 확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회원사 소식



▣ 기아자동차, 2009년 상반기 공정거래법 교육 실시

“공정거래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전략” 강조



기아자동차 이재록 재경본부장

기아자동차는 6월 16일 본사에서 자율준수관리자인 이재록 재경본부장을 비롯해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영업·구매본부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상반기 공정거래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재록 재경본부장은 본 교육 실시에 앞서 당부의 말을 통해 “기업의 공정거래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경영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공정거래 법규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해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또한 “자율준수협의회 위원들이 자발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물론 내부 점검 활동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공정거래 마인드 제고와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교육을 통한 사내 자율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서기관을 강사로 초청해 공정거래 제도의 의의 및 주요 내용과 함께 올해 공정거래정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 종료 후에는 주식관리팀에서 2009년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운영방안과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사내에서 실시한 2009년 상반기 공정거래법 설문결과를 발표했는데, CP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매우 높은 것(99%)으로 분석되어 CP의 중요도 제고 및 사내외 추진활동 홍보가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준수의지에 대한 임직원의 현재 체감도는 보통 수준(70%)에 머물러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사내 자율준수 풍토 조성활동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다양한 공정거래법 교육 기회 확대 통한 실천동기 부여 및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정기적 집합교육이 가장 많이 선호됐으며, 다음으로는 사업본부별 방문 및 맞춤교육, 그리고 사이버교육 확대 및 승진자 교육 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는 하반기 중에도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해 공정거래 마인드 제고 및 자율준수협의회 역할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영업·구매·본사 부문 등으로 세분화 해 부문별 사례 중심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면서 방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현대자동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실천 강화

올해 CEO의 자율준수의지 재천명 이후 자율준수문화 전사적 확산 노력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02년 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대표이사인 양승석 사장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전 임직원에게 자율준수의식을 생활화 하고,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업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선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자동차는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 집합교육 및 주요 임원 및 신입사원 대상 사이버교육 실시, 사내 공정거래 홈페이지를 통한 종합적인 공정거래 관련 정보 제공,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전부서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배포, 사내 불공정거래행위 내부신고 시스템 운영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정착 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런 일련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자율준수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사내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공정거래 소식지’를 자율준수관리자 정태환 부사장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발송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공정거래 모범팀’을 선정해 포상하는 등 자율준수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9월 국내 최대 규모인 2,400개의 협력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근간으로, 3대 가이드라인 도입하고 자금과 기술·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하반기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천 강화를 통해 주주와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정거래 모범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SK그룹-IBK기업은행, 상생펀드 협약식' 개최

중소협력사 위기 극복 위한 1200억원 상생펀드 조성

SK그룹이 지난해 9월 중소 협력사와 맺은 상생협력 협약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대규모 '상생펀드'를 조성, 협력업체 지원에 나선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프로그램(TCP)에 대한 실천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SK그룹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각각 6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경제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1,2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6월 3일 서울시 서초문동 오피스에서 IBK기업은행 윤용로 행장과 SK그룹 상생경영 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SK그룹·기업은행 상생펀드 협약식'을 가졌다.

SK그룹과 IBK기업은행은 이 기금을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자금지원 및 최고 2.34%까지 이자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들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연 금리 6%로 5억 원을 대출 받는 업체의 경우 최고 2.34% 낮은 3.66%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연간 1,17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번 '상생펀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금리인하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력사 중 자금수요가 필요한 기업을 추천하며 협력사는 보증기금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거나 또는 직접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은 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K그룹 상생경영위원회 김창근 부회장은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 협력사에게 가장 절실한 어려움은 자금 유동성이 일 것"이라며 "이번 '상생펀드'가 대기업-중소기업 '행복 동반자' 관계형성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위기극복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지난 5월 29일 15개 주력 관계사 비즈니스 파트너 200명을 충북 충주시 인등산 SK행복마을로 초청해 'SK 한마음 한뜻 인등산 행사'를 갖고 건강한 대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문화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SK그룹은 임직원들의 급여를 반납하여 조성한 100억 원 규모의 자원으로 중소 협력업체 1,800여 명의 상생인턴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신뢰 기반의 상생 인프라 구축 △ 시너지 창출 통한 경쟁력 제고 △ SK식 상생문화 구축 등을 3대 핵심 추진 사업으로 선정해 '위기 극복형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현대모비스, 삼성LED와 '자동차용 LED 헤드램프' 국산화 개발 협력

미래형 첨단기술 개발 위해 산업간 경계 허물고 두 대기업 협력



현대모비스(대표 김동진)는 5월 30일 자동차 헤드램프용 LED 및 모듈의 공동 개발을 위해 삼성LED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제동시스템 · 에어백 · 헤드램프 등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한 설계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한 현대모비스와 핸드폰 · LCD TV 등에 적용되는 LED에 대한 독자기술을 보유한 삼성LED가 미래형 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간 경계를 넘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대모비스와 삼성LED는 앞으로 헤드램프와 LED에 대한 각각의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자동차 헤드램프용 LED 소자의 국산화를 위한 공동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현대 및 기아차의 고급차종에 LED 헤드램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현재 상용화된 자동차용 LED 헤드램프는 일본의 도요타의 렉서스 600h 차종(하향등)과 아우디의 R8차종(상 · 하향등)에 적용된 것이 유일할 만큼,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다.

이에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대모비스 정석수 사장은 "삼성과 공동 개발하게 될 LED 헤드램프는 세계적 수준의 성능 확보는 물론, 선진업체들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면서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친환경 LED 헤드램프를 일반 차종까지 보급화 시키는 한편, 해외 완성차에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개발에 착수한 LED 헤드램프를 인공지능형 전조등 시스템(AFLS)에도 적용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도로상태 · 주행 및 기후조건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램프가 상하 · 좌우로 자동적으로 구동되는 AFLS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LED 헤드램프 개발 외에도 현대모비스는 현재 전장업체인 현대오토넷을 합병했으며, 이를 통해 핵심부품 지능화와 새시전자화 등 자동차 시스템기술과 전자제어기술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R&D 부문에 지난해보다 60% 많은 2천여 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삼성의 LED사업을 전담하는 삼성LED도 삼성전기의 LED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접목해 품질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삼성LED는 현재 LCD용 BLU 및 휴대폰용 LED를 중심으로 LED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용 LE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회원사 소식



▣ GS, 쌍용 지분 인수 의결

신사업 발굴 및 추진 플랫폼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 및 해외사업 역량 강화 위해 쌍용 인수

GS(대표 허창수)는 (주)쌍용을 통해 GS그룹의 신사업 발굴 및 추진 플랫폼을 확보하고, 쌍용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트레이딩(Trading) 역량을 활용하여 GS의 기존 네트워크 및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쌍용 인수를 결정했다.

GS는 5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MSPE가 보유하고 있던 쌍용 보통주 69.53%(7,425,634주)를 최종 실사를 전제로 1,200억 원에 매입키로 했다.

쌍용은 1999년 외환위기로 쌍용그룹이 해체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5년에 출업하고, 2006년 MSPE에 매각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됐다.

GS는 이번 인수계약을 통해, 쌍용의 축적된 글로벌 무역 역량과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가 항후 GS그룹의 글로벌 사업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GS는 쌍용을 통해 계열사의 기존 네트워크 및 사업역량을 종합·활용함으로써, 국가 단위의 마케팅을 수행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획·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사의 다양한 상품의 전문성 및 사업화 역량을 활용하여 그룹의 신사업 발굴 및 미래성장동력을 확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사의 유연한 조직구조 및 새로운 사업기회 포착을 위한 뛰어난 기업가 정신은 GS그룹이 중장기 성장기회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 관계자는 “쌍용 인수로 계열사의 해외사업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이 가능해져 GS그룹 글로벌화의 촉진은 물론 신사업 발굴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쌍용 역시 GS그룹의 사업역량을 활용하여 종합상사로서 보다 확고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은 7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7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주)쌍용’에서 ‘(주)GS글로벌’로 변경키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택근 전 GS리테일 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하고, 김석환 전 GS EPS 상무를 CFO로 선임했다. GS그룹은 이날 쌍용 이사회를 통해 주요 경영진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영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경제 3단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서면계약문화 정착 선포식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선포식'이 5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선포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상생협력 및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선언문'에 합동으로 서명해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업계의 의지를 보였다. 또한 그 동안 협력사와 공정거래와 상생지원(자금, 기술)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하도급 공정 거래 협약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도 있었다.

협약 우수기업으로는 포스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이,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LG전자, 삼성물산, 포스코의 사례가 공개됐다.

백용호 전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중요성과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 정착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서면계약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 경제에 신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정거래가 동반된 시장경제를 정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6월 30일까지 실시됐으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등 14개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 한국경쟁법학회 2009년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정호열)는 서강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22일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세미나실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리 및 관련 제도의 발전 동향'이라는 주제로 2009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업, 정부부처, 대학, 법무법인 등 여러 기관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방법의 문제'라는 주제로 아주대 오승한 교수가, '입찰단합의 규제법리'라는 주제로 경북대 신영수 교수가 각각의 주제를 발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가 사회를 담당한 제2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의 지철호 국장이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주제로,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성운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무 운용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학계·관계·법조계의 전문가 6인도 패널토의에 참가했는데, 서울대 이봉의 교수,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동열 변호사, 영남대 심재한 교수, 법무법인 화우 허선 선임컨설턴트, 법무법인 광장의 안용석 변호사 등이 주제발표에 이어서 주요 이슈와 관련해 토론에 참여하면서 한층 폭넓은 정보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